

민주 '李 무죄 탄원' 최대 수위 여론전...판결 후 대응 논의도

선고 당일 법원 앞 검찰 수사 규탄 집회 등 당력 결집 '벌금 100만원 이상시 타격' 우려...“리더십은 이상무” 유무죄 다툼 큰 25일 선고에 더 무게...“사법리스크 고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의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물론, 판결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당력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유죄를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당내 공통의 인식”이라며 무죄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사를 두고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인식

이 번져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검찰독재 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15일 판결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응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으나,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미 유·무죄를 가려왔을 텐데 민주당이 모인다고 결론이 달라지겠나”라며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무죄 예상' 기류가 대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400여원대의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자연스레 이재명 지도부가 최대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리더십'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흠집은 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면서 이재명만 잡아넣는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그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외에 현재로서는 당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만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무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판결에 따라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워낙 그런 (판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했던 만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까지 받아내야 진정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사정기관 특별비·지역사랑상품권 등 놓고 공방 18일부터 조정소위, 사업별 감액·증액심사 도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날에 이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위는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예결위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대폭 '칼질'을 베푸는 대통령실·경호처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특정업무 경비가 생기면서 과거의 특수활동비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특별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며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길 의원(광주 동남)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별비를 줄여왔는데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뤄졌다”

며 “법무부 특별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이유가 금융 범죄 명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범죄 관련 특별비를 더 늘려야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을 놓고도 실전이 이어졌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은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희가 편성한 안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평균 부지 매입비를 하다 보니 조금 상승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건축 비용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국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총공세

'당선 무효형' 선고 기대감 속 전열 정비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434여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청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격'에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선

야권의 장외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판사와 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겁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진수기자

尹, 연초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 발표

소득·교육 등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격차 해소 초점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책 분야로는 우선 소득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소득 양극화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교육 격차 해소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소외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지역·계층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역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일파크골프

무스당 미크골프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